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나라재정 보기

02

2023 February

Vol. 74

FIS 인사이트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집행의 역할

재정칼럼

조기집행(Early Budget Execution)의
신화(Myth)를 넘어서
공공지출 및 재정책임성 프로그램(PEFA)의
재정집행 평가지표

한국 재정사의 현장

보수 학자의 추경예산안과 2023년 경기전망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②



CONTENTS

2023 FEBRUARY

Vol. 74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157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재정 INSIGHT

04

FIS 인사이트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집행의 역할

김민경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0

재정칼럼

조기집행(Early Budget Execution)의

신화(Myth)를 넘어서

김정학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ESG협회 이사장

공공지출 및 재정책임성 프로그램(PEFA)의

재정집행 평가지표

조병우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재정 NOW

2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26

키워드 재정

금리

30

해외재정동향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주요국 에너지 정책방향

38

재정현안 속 FIS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보관금 관리 강화



재정 STORY

42

재정원 받은 메일함 열어보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2022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대상

44

이달의 재정 이야기

글로벌 정책 인재를 키우는 원동력
KDI 국제정책대학원

48

재정 방방곡곡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

52

한국 재정사의 현장

보수 학자의 추경예산안과 2023년 경기전망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②

56

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

엄정한 회계로 무역을 장악한 개성상인
복식부기의 원리

60

재정 캘린더

63

애독자 코너



기획재정부는 재정 신속집행을 포함한 조기집행 기조를 강조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12월에 발표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한 방안 중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부분에서 조기집행을 언급하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상황을 고려한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한 경기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유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 기조였던 재정정책이 엔데믹으로 전환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재정집행의 역할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본 논의에서는 재정운용에서 재정집행의 역할을 2023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sight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집행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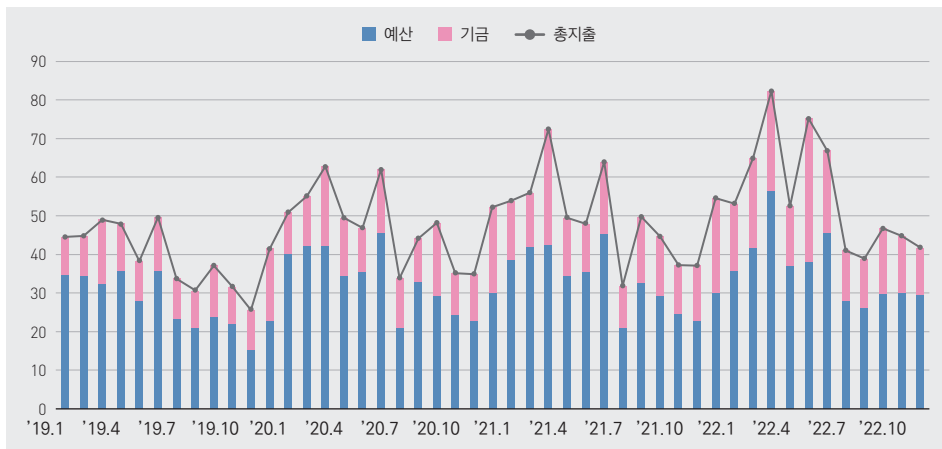
김민경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kkim@kpfis.or.kr)

재정관리 및 통제 수단으로서의 집행

OECD(2019)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예산당국이 건전하고 신축적인 예산 관리 기능을 하여 국회와 같은 외부 환경의 통제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은 정부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외부의 새로운 재정 상황의 변동에 대응할 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행시점과 규모를 조정하여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지출은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면서 운용되는데 경기 침체 시에는 예산의 조기배정 및 신속·조기집행과 같은 집행시기 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국경복, 2015).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대응으로 전 세계적 확장 재정 기조가 약 2년 동안 이어졌다. 이것이 국제적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면서 재정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도 팬데믹에 대응하여 재정을 투입해 경기 지지대의 역할을 수행하던 기조에서 2022년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의 속도를 조절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비축 물자 보급과 관련 사업 위주로 집행을 관리하는 등 경기변동에 대응한 집행을 재정운용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회계·기금별 월별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2023), 〈월간 재정동향〉 1월호

〈그림 1〉은 2019년도 1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 월별 총지출 규모의 추이를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보여준 것이다. 경기 부양 및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도에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재정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재정당국의 재정집행의 세부적 지침사항은 매년 발간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재정집행을 통해 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②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③ 예산 신속집행, ④ 일자리 지원, ⑤ 수입관리 강화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⑤ 수입관리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재정지출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는 지출 효율성 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같은 노력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며 예산 배정의 절차 준수 및 배정의 유보와 당겨서 하는 배정과 같이 속도 조정을 통한 관리지침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는 예산집행에서의 책임성 확보 및 예산 누수 방지와 관련된 것으로 집행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중앙재정 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집행을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예산의 신속집행을 기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지침에서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로 경기대응 역할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 전년도 이월 사업, SOC 계속 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재정집행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관리 점검단을 운영하고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운영하여 재정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네 번째로 일자리 지원 사항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히 집행하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집행관리 방향은 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②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지원, ③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세 방향으로 나누어 있으며 집행시점과 재정집행 대상에 따른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에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방침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경기 대응에 대한 집행의 재정운용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농축산물 비축 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계약재배), 농업관측 사업 등 물가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물가변동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집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도 집행관리 방향

재정당국은 「국가재정법」 제44조 예산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 주체의 예산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매년 집행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지침을 살펴보면 해당 집행 연도의 집행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23년도 집행지침은 크게 예산집행지침과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집행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집행지침 부분에서는 사업유형별 지침과 비목별 지침으로 상세히 나누어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유형은 인건비, 기본경비, 민간보조 사업 등 총 17개 사업유형별로 작성되어 있다. 비목별 지침은 운영비, 연구용역비, 여비 등 총 19개 비목별로 작성되어 있다.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부분에서는 수입지침과 지출지침,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으로 작성된다.

2023년도 집행관리에서 주요 포인트는 국제적인 경기 흐름을 반영하여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등을 상저하고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 특례 기간 연장 및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 등 예산 신속집행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재정의 신속집행 기조는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경제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표 1〉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관리계획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잠정)*		
	연간 계획	상반기 계획	
		금액	집행률
중앙재정	240.0	156.0	65.0
지방재정	217.1	131.3	60.5
지방교육재정	25.4	16.5	65.0

자료: 2023년 재정 신속집행계획(기획재정부)

*신속집행 대상 규모는 2022년도 이월 등을 반영하여 2023년 2월 세입·세출 마감 후 확정 될 예정

〈표 1〉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재정 신속집행계획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앙재정 240조원, 지방재정 217.1조원, 지방교육 재정 25.4조원 등 총 482.5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연중 관리하기로 발표했다.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상반기 중 중앙재정 기준 303조원, 65%의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재정당국은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 집행관리 노력을 병행하여 총지출 638.7조원 중 약 60% 이상, 규모로는 383.2조원을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표 2〉 중점관리 대상 현황

중점 집행관리 분야	중점관리 대상	관리 규모	합 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145개)	14.9조원	31.5조원
민생·물가안정 사업	민생안정 사업(36개)	11.2조원	
	물가안정 사업(45개)	5.4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구성

1월에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도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대응과 사회적 약자 및 민생의 어려움 경감을 위한 민생 사업과 일자리, SOC 사업 등의 중점 집행계획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계획에서는 상반기에 공공 및 재정 민자 부문에서 약 340조원을 투입하고 민생안정 사업 11.2조원 및 일자리 사업 14.9조원 등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함으로써 경제 안전망으로서의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 총 30.3조원 규모로 이는 다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에 13.4조원을 투입하고 고용장려금에 5.1조원, 직업훈련에 2.7조원이 투입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국은 이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관리대상 사업 예산 14.9조원 중 10.4조원(약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고용 상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자 한다. 연초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이 최대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 자금 배정, 상반기 배정률 향상, 주기적인 집행실적 점검 등으로 집행관리를 수행하여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생안정 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2조원의 관리 대상 사업으로,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8조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7.0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맞춤형 사업 관리를 통해 적기에 사업성과를 창출하려는 집행 목적을 갖고 있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의 45개 사업, 5.4조원 규모로 수급관리 안정 지원(3.9조원), 식량안보 강화(0.7조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수급상황, 수요 집중시기 시장가

격 동향에 따라 예산의 적기 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다. 재정당국은 이처럼 일자리 및 민생·물가안정 재정사업의 집중적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정책 목표 달성 및 경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시사점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예산은 집행을 통해 실현된다.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예산-집행-결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시점의 규모를 나타낸다면, 집행은 특정 기간 동안의 집행을 집계와 흐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있어 관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 경제·사회적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운용도 확장적 기초에서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및 신속집행으로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집행관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정당국은 재정 투입의 시점과 규모의 신속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 소개한 2023년도 재정집행 기초가 성공적인 재정운용의 도구로써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자금 배정과 같은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해당 기초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 등 수시 점검하는 집행관리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재정집행의 경우 사업 수혜자 등에 귀속되는 실집행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집행 성과 점검 과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2023년의 재정운용 환경은 이처럼 경기의 하방압박 및 물가안정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재정 집행관리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재정의 투입 및 집행으로 일조할 수 있도록, 또한 앞서 발표된 재정당국의 집행 관리 기초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주체자들의 협조와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관계부처합동(2023), 2023년 재정 신속집행계획.
- 국경복. (2015). 『재정의 이해』. 나남.
- 기획재정부(2023), 2023 예산집행지침.
- 기획재정부(2023), <월간 재정동향> 1월호.
- 기획재정부(2023.1.11.),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
- OECD(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조기집행(Early Budget Execution)의 신화(Myth)를 넘어서

김정학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ESG협회 이사장



1. 들어가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은 더 높은 수준에서의 국가 재정관리를 요청한다. 특히, 2023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더불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위험이 예상되는 바, 재정의 경제성장 및 안정 기능에 대한 역할 수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本稿)는 재정관리의 일환인 조기집행의 의미를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조기집행¹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 탐색해보기로 한다.

2. 조기집행의 역할

조기집행은 재정집행 관리방안의 한 일환으로써 회계연도 중 상반기의 경기가 가라앉고 하반기에 살아나는, 즉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예상될 때, 상하반기 간의 경기진폭을 완만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상반기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정부 재정 투입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 소비 증대, 생산 증대, 고용 증대, 소득 증대, 경기 부양을 최종 목표로 하는 재정주의(Fiscalism)를 따르는 것이다.

조기집행의 또 다른 기대역할은 회계연도 기준, 하반기의 예산 불용액 및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1년 단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회계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편성된 예산의 불용을 막기 위해서 연말에 사업들을 몰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불용액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집행은 상반기 예산집행을 독려하기에 하반기에 몰리는 예산집행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며 재정 관리점검단을 통하여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배정계획(2022.12.27. 확정)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 예산의 75%가 배정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예산배정계획이며 조기집행의 기초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조기집행의 신화

조기집행의 기대역할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듣기 좋은 격언(Proverb), 더 나아가서는 신화(Myth)에 불과할 것이다. 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조기집행 실효성에 대한 결론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필자가 고민하는 조기집행에 대한 신화적 성공·민임을 우선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조기집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정권별로 용어의 차이는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균형집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속집행이라고 표현했다.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무상 용어이기에 본고에서는 상반기 재정집행을 제고로써 첫 도입 명칭인 조기집행으로 통일하여 쓴다.

신화 1. 상반기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전체 재정지출 규모에 의한 지역 경제성장 전인 효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조기집행 자체가 지역 경제성장에 정(Positive)의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여차민·이석환, 2014). 오히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지출 규모와 지역 경제성장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 또한 존재한다(최은호·홍준현, 2020).

이러한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조기집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늘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것은 의문이다.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기 예측도 존재하는 것이다. 상고하저의 경기가 예상될 때는 논리적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이 아닌 하반기 지연집행이 맞을 것이다. 재정정책이 경기역행적인지 동행적인지 확인하는 한 방법은 재정팽창지수와 GNP갭과의 부호 비교이다. 우리나라는 경기상황에 맞는 재정정책기조는 세우고 있지만(이삼호, 2005) 실제 지표 상으로는 경기동행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원구환, 2009). 경기상황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의 매해 반복되는 조기집행은 더욱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것이다.

신화 2. 불용액 감소가 예산 효과성을 증진한다.

조기집행을 통한 불용액 및 이월금 감소는 실증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조기집행을 통해 최소화하고자 한 연말지출비율은 감소하지 않는다(최정우·신유호, 2018). 조기집행은 상반기 60% 재정집행, 70% 재정집행 식으로 점점 및 관리된다. 설정된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한 경우, 나머지 40% 혹은 30%는 어떻게 집행될까? 극단적으로 하반기 연말에 집행한다고 상상하는 경우,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기집행 달성 후, 하반기 남은 집행잔액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어쩌면 일반적인 재정행태(Fiscal Behavior)일 수 있다.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예산을 연말까지 아껴 두었다가 불용 처리되기 전에 집행하는 것을 과연 불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용액이 줄었다고 해서 조기집행에 모든 공을 돌리기도 힘들다. 불용액 없음은 편성된 예산액을 모두 소진했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예산의 효과적 집행 의미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의 효과성은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이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했을 때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복 예산 등의 문제는 존재한다. 불용액 감소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불용액 감소만으로 예산의 효과적 집행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신화 3. 조기집행은 실제 집행을 반영한다.

조기집행에서 집행액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구는 실무에서 산정하는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집행액/조기집행 대상액×100%)을 활용해 조기집행의 효

과성을 논의한다. 이 산식에서 집행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조기집행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산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지출)을 집행 완료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수령자에게 예산이 도달하는 시점을 집행 완료로도 볼 수 있는 등 관점에 따라 예산집행이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당국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이 실제 최종 수령자(혹은 사업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실집행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적 및 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실집행액 파악 가능하나, 간접 수행하는 사업(보조·출연·출자 등)은 정확한 실집행액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간접수행 사업의 경우, 재정정보 시스템 간 연계의 문제(예산과목 예: 420 건설비, 430 유형자산, 440 무형자산), 수기 집계 방식의 문제(예산과목 예: 320 민간이전, 450 용자금),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예산과목 예: 330 자치단체 이전-경상·자본보조)과 지자체 사업간 매핑(Mapping)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검증 및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켜 실집행액 파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1).

집행액과 실집행액 집계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기집행 점검 및 파악 또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수혜자 등에게 귀속되는 실집행을 기준으로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조기집행 성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조기집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특히, 조기집행이 목표로 하는 경제안정화 기능은 정부 예산이 최종 수령자에게 도달했을 때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수 있다.



4. 조기집행 신화의 극복

예산의 집행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소속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는 분기별 GDP를 추계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활동 주체로써 소비 및 투자지출을 통해 GDP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측정한다. 소비지출은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소비한 비용 및 노동력에 대한 임금 등으로 측정하며 투자지출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자산 구매 등에 소비한 지출 등으로 측정하는데, 미국 역시 지출 과목의 교부 시점을 집행으로 보아 실적 추계한다. 우리 정부와 다른 점은 미국은 분기별 정부지출 추계를 위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정보 자료 수집 시 설문 자료에 의존하며 전수 조사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또한 있어서 정부지출 추계 자체의 오류 가능성,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다(기획재정부, 2021).

우리 정부가 집행과 실집행에 대한 괴리를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해외국의 경우 보다 훨씬 더 앞선 경우이다. 조기집행 제도 또한 그러하다. 해외국에서의 조기집행 제도 혹은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필자는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 첫째, 조기집행을 실시할만한 재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해서다. 둘째, 조기집행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다수가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재정의 경제안정화 역할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조기집행이 시의적절하게만 실행된다면 예산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러했다. 수령자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했을 때 경기부양이 시작된다고 인식하여 재난지원금을 수령자(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조기·신속집행이었으며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첫 번째 원인이 맞는다면, 우리 정부는 재정관리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일이다. 조기집행을 실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일이니 잘 활용만 하면 될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조기집행 제도를 시행할 일인 것이다.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경기역행적으로 조기집행을 작동시킬 역량을 갖추는 일이 현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와 같은 시기인, 2002년부터 일본 재무부에서도 예산집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예산집행조사는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을 인식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연계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조기집행 개념의 점점 및 조사는 부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예산집행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² 공무원이 직접 예산사업 현장에 가서 예산집행

² 조사 대상 선정 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예산집행의견 형태로 반영한다고 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파악한다는 점이다. 사업의 진척 상황 점검, 사업의 효과 발생 점검, 사업의 비용 점검 위주로 조사한다고 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우리 정부의 조기집행 실적 점검 방식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기집행 대상 및 대상액을 선정할 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할 때 계량 지표 관리 외에도 실제 조사를 통하여 조기집행이 왜 저조한지, 더 나아가 사업의 효과성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예산집행 점검 없는 조기집행 점검은 결만 화려하고 속은 곤궁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모습일 것이다.

5. 나가며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Carlo Rovelli)는 그의 저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The order of time)』에서 독자들에게 과거-현재-미래의 개념을 분해하고 해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사고방식으로는 기존 틀을 깨트리기 힘들다. 지금 우리는 일반적 시간관념, 정해진 회계연도 안에서 조기집행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회계연도는 변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상이하다. 변화할 수 있는 회계연도 개념에서 상반 기 조기집행이라는 개념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기상황에 따라서 조기집행은 그 생성 및 소멸이 자유로워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 긴축재정의 시대에서 관례적인 조기집행은 공허할 뿐이다. ‘신속한’, ‘실제 집행’이 꼭 필요한 ‘시기’, 적절한 ‘곳’에서 예산사업이 제대로 실적 발휘하기를 바라며 마친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2021), 정부 재정집행의 전달체계 분석 및 시사점. 세종: 기획재정부.
- 여차민·이석환.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한국행정논집, 26(4), 665-685.
- 원구환. (2009). 지방재정정책과 경기변동 대응분석: 재정팽창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1), 115-132.
- 이삼호. (2005).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05-02,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최은호·홍준현. (2020).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3), 57-83.
- 최정우·신유호. (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3(3), 53-7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재정집행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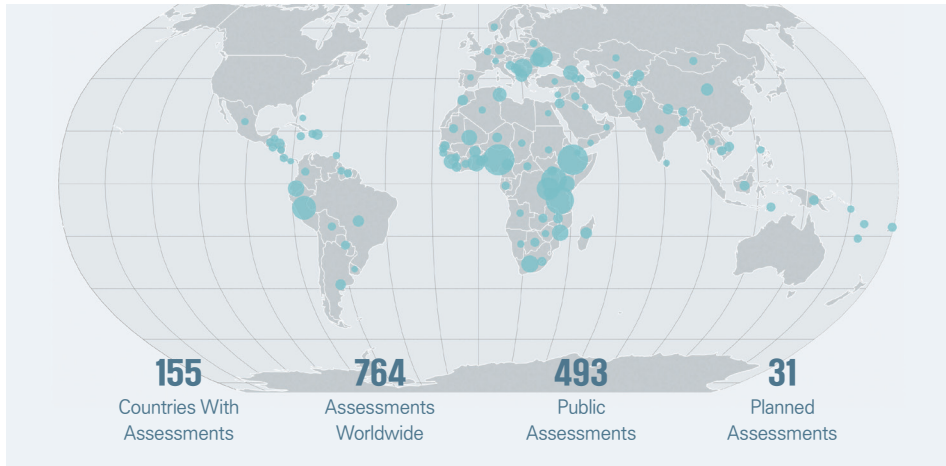
공공지출 및 재정책임성 프로그램(PEFA)의 재정집행 평가지표

조병우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코로나19의 대유행이나 경제위기 등 불확실한 시기에는 정부의 특별지출이 의도된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재정집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재정집행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재정관리 기조가 강조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재정집행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55개 국가가 사용한 바 있는 PEFA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본고는 PEFA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PEFA가 다루는 7개 분야 중 예산집행 관리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구성을 살펴봄으로, 집행관리 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는 국제적 관점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지출 및 재무책임성 프로그램(The 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Program, 이하 PEFA)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및 영국 정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2001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PEFA의 발족에 참여한 파트너 조직들의 공공재정관리 상황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되었으며, 차후 공공재정관리를 진단·평가하는 표준방법론인 PEFA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PEFA 프레임워크는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지표를 사용하여 공공재정관리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정량지표는 특정 시점의 공공재정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이면서, 같은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연속성을 가지는 평가를 실시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다. PEFA 프레임워크는 중앙정부의 공공재정관리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점차 지방정부의 공공재정관리에도 적용되고 있다. 2019년에는 슬로바키아 재무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이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으며, 2023년 현재 총 155개 국가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PEFA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764건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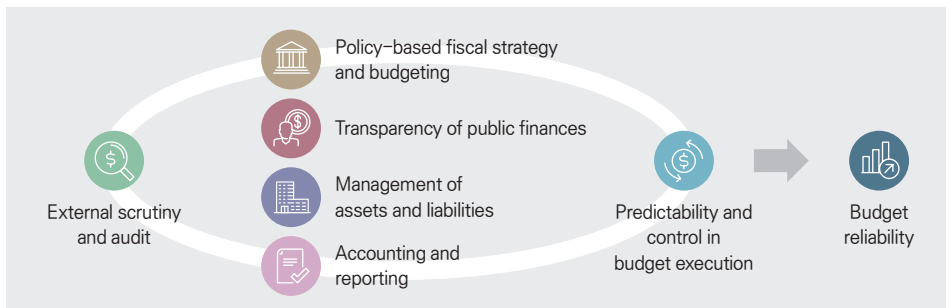
〈그림 1〉 PEFA 프로그램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료: <https://www.pefa.org/>

현재 사용되고 있는 PEFA 프레임워크는 PEFA 2016으로 2005년과 2011년에 걸쳐 발표된 PEFA 프레임워크를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수립되었다. PEFA 프레임워크는 7개의 광범위한 활동 영역(Pillars)에서 공공재정 관리의 31개 중요 요소(Indicators)에 걸쳐 94개의 특성(Dimens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활동 영역은 ① 예산의 신뢰성(Budget reliability), ② 공공 재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public finances), ③ 자산 및 부채의 관리(Manag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④ 정책 기반 재정 전략 및 예산 편성(Policy-based fiscal strategy and budgeting), ⑤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 및 통제(Predictability and control in budget execution), ⑥ 회계 및 보고(Accounting and reporting) 그리고 ⑦ 외부 정밀 조사 및 감사(External scrutiny and audit)로 예산 사이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각각의 활동 영역별로 다수의 중요 요소와 특성을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림 2〉 PEFA의 7개 활동 영역과 예산 사이클



자료: PEFA(2019), Framework for assessing public financial management(<https://www.pefa.org/resources/pefa-2016-framework>)

다섯 번째 활동 영역인 예산 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통제는 총 8개의 지표와 28개의 특성으로 측정된다. 8개의 지표는 세입행정(Revenue administration, PI-19), 세입회계(Accounting for revenue, PI-20), 연중 자원 배분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of in-year resource allocation, PI-21), 지불 체납(Expenditure arrears, PI-22), 임금 통제(Payroll controls, PI-23), 조달(Procurement, PI-24), 비임금 지출에 대한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s on nonsalary expenditure, PI-25), 내부 회계감사(Internal audit, PI-26)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행정 지표는 조세행정, 관세행정, 사회보장기여행정 등 중앙정부 세입을 관리하는 주체와 관련이 있으며, 천연 자원 채취와 같은 다른 중요한 세입원을 통한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도 포함한다. 이는 세입 수단에 대한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for revenue measures), 세입 위기 관리(Revenue risk management), 세입회계 및 조사(Revenue audit and investigation), 세입 체납 모니터링(Revenue arrears monitoring)의 특성을 측정한다. 세입회계 지표는 세입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수입의 통합, 그리고 세수계정을 조정하는 절차를 평가한다. 이는 세수에 대한 정보관리(Information on revenue collections), 세수의 이전(Transfer of revenue collections), 세입 계정의 조정(Revenue accounts reconciliation)의 특성을 측정한다.

연중 자원 배분 예측가능성 지표는 중앙정부의 재정담당 부처가 현금지출 및 요구를 예측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단위 별 자금 가용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는 현금잔고의 통합(Consolidation of cash balances), 현금흐름의 예측 및 모니터링(Cash forecasting and monitoring), 현금 지출의 한계점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commitment ceilings), 연간 예산 조정의 특성(Significance of in-year budget adjustments)을 측정한다. 지불 체납 지표는 체납액의 규모와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통제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 지표는 지불 체납의 규모(Stock of expenditure arrears)와 지불체납 모니터링 제도(Expenditure arrears monitoring)의 특성을 통해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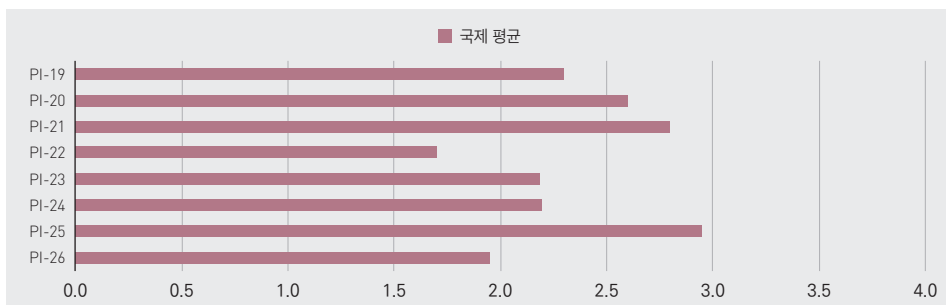
임금 통제 지표는 공무원 급여를 관리하는 방법, 변경사항을 처리하는 방법, 인사기록 관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한편 임시 노동에 대한 임금과 재량 수당은 비임금지출에 대한 내부 통제 지표 평가에 포함된다. 임금 통제 지표의 경우 임금과 인사 기록의 통합(Integration of payroll and personnel records), 임금변화 관리(Management of payroll changes), 임금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f payroll), 임금 회계관리(Payroll audits)의 특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비임금지출에 대한 내부 통제 지표는 의무의 구분(Segregation of duties), 지출의무액 통제의 효과성(Effectiveness of expenditure commitment controls), 그리고 지급 규칙과 과정에의 부합 여부(Compliance with payment rules and procedures)의 특성을 통해 측정한다.

조달 지표는 조달 관리와 관련하여 조달 계약의 투명성,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절차의 강조,

조달 결과의 모니터링, 그리고 항소와 배상 관련 계약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조달 모니터링(Procurement monitoring), 조달 방법(Procurement methods), 조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Public access to procurement information), 조달에 대한 컴플레인 관리(Procurement complaints management)의 특성을 통해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회계감사 지표는 내부 회계감사에 적용된 표준 및 절차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부 회계감사의 범위(Coverage of internal audit), 적용된 회계감사 및 표준의 성격(Nature of audits and standards applied), 내부 회계감사와 리포팅의 집행(Implementation of internal audits and reporting), 내부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Response to internal audits)의 특성을 통해 측정한다.

PEFA의 2022 공공재무관리 글로벌 리포트(Global Report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재정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특별 지출(Extraordinary expenditures)이 의도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지출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강력한 구속과 지출 통제를 갖는 것이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조사대상 국가들은 세입회계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잘 수행되었으나, 수입과 지출 모두의 체납에 대한 감시가 허술하다는 점이 관찰되었다(PI-22). 한국 정부는 PEFA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고, 2022년에 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 하지만, 2022년의 예산집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PEFA의 지표(Indicators)와 특성(Dimensions)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림 3〉 PEFA 집행관리 부문 지표별 국제 평균



주: 성과지표 19번에서 26번(PI-19~PI-26)의 정보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 성과지표는 4점 만점

자료: PEFA(2022), 2022 Global Report on Public Financial Management(<https://www.pefa.org/global-report-2022/en/report/global-pfm-performance/>)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기준 재정동향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총수입

571.6조원

(누적 기준)

2022년 예산
609.1조원

571.6조원

진도율 **93.8%**

총지출

622.5조원

(누적 기준)

2022년 예산
679.5조원

622.5조원

진도율 **91.6%**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1.

국유재산 규모

1,356.7조원

(누적 기준)

행정재산
1,016.2조원

74.9%

일반재산
340.5조원

25.1%

국유재산 수입

1,335억원

(누적 기준)

매각대
988억원

74.0%

대여료
302억원

22.6%

변상금
44억원

3.3%

국유재산 취득



8,033억원

국가가 매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상의 순증을 가져오는 행위

국유재산 처분



4,194억원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행위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571.6조원

진도율 **93.8%**

전년 동기 대비
+47.7조원

2022년 총수입 예산
609.1조원 대비

총지출

622.5조원

진도율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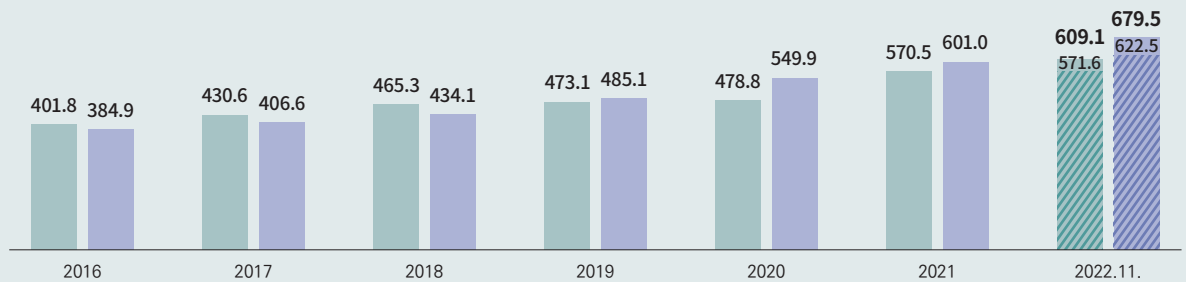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76.2조원

2022년 총지출 예산
679.5조원 대비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2022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조원)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373.6조원

전년 동기 대비
+50.2조원

세수진도율
94.2%

세외수입

27.4조원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

세수진도율
96.6%

기금수입

170.5조원

전년 동기 대비
-4.0조원

세수진도율
92.6%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108.5조원

주: 세수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예산지출

401.7조원

전년 동기 대비
+33.0조원

진도율
89.3%

일반회계

348.8조원

특별회계

53.0조원

기금지출

209.5조원

전년 동기 대비
+34.3조원

세수진도율
91.2%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61.3조원

재정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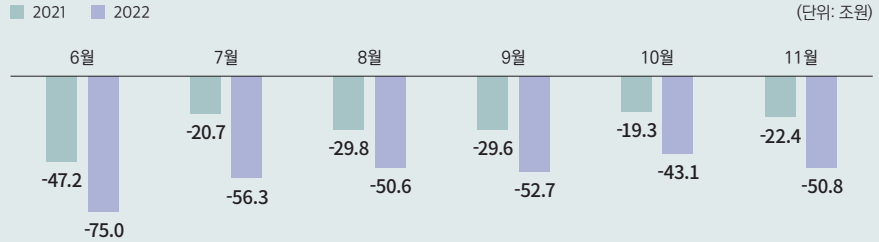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50.8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28.5조원



관리재정수지

98.0조원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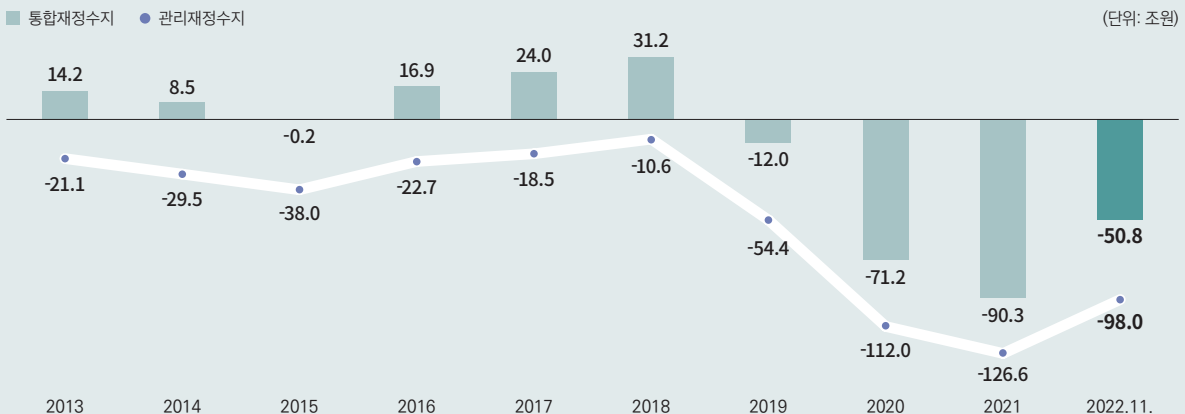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21.0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7.2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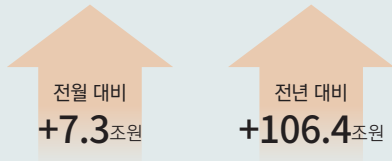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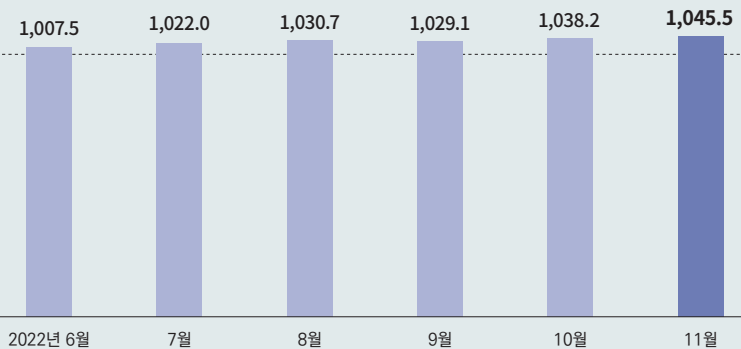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1,045.5조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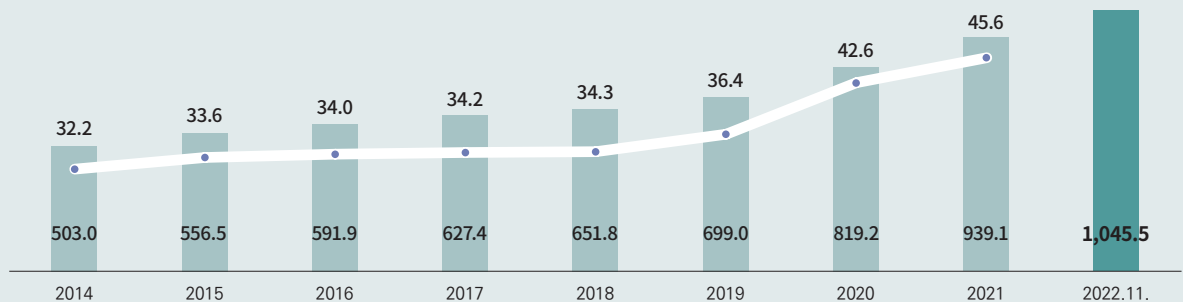


2022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1,045.5조원



■ 누적채무 ● GDP 대비

(단위: 조원, %)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2021년까지는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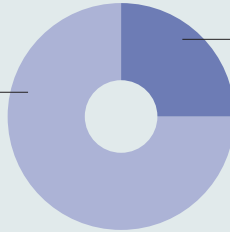
국유재산

국유재산

1,356.7 조원

전년 동기 대비
+182.0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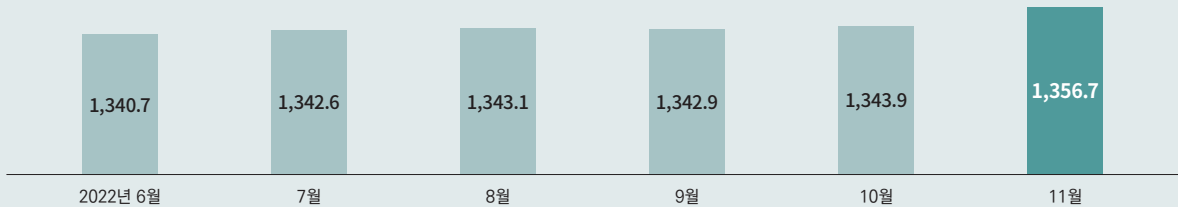
행정재산
1,016.2 조원
74.9%



일반재산
340.5 조원
25.1%



(단위: 조원)



주: 2022년 자료는 잠정

국유재산 수입

국유재산 수입

1,335 억원

전년 동기 대비
-224 억원

매각대
988 억원
74.0%

변상금
44 억원
3.3%



대여료
302 억원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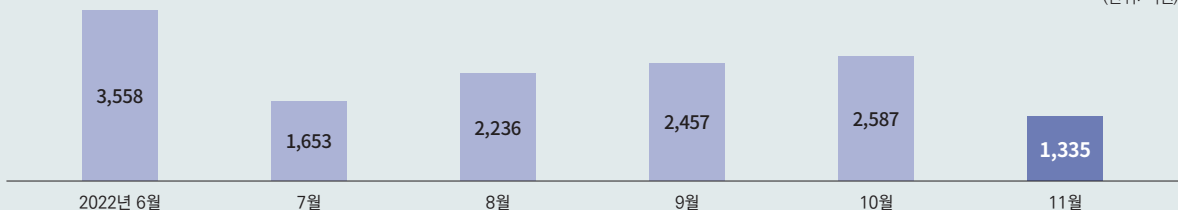
토지, 건물 등
954 억원
96.6%

재고자산
33 억원
3.3%

기타고정자산
1 억원
0.1%

- 주 1) 매각대: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수납한 대금
2) 변상금: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3)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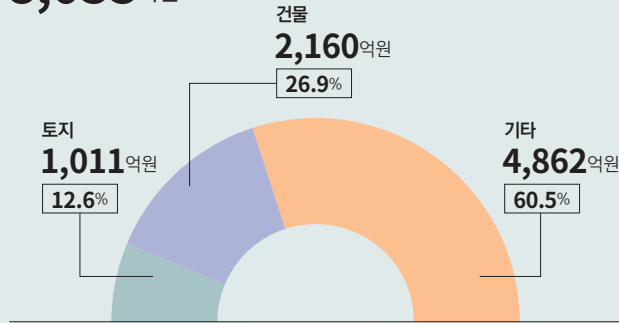
(단위: 억원)



주: 2022년 자료는 잠정

국유재산 취득·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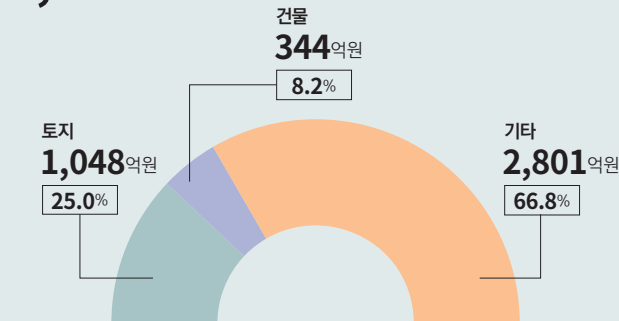
국유재산 취득
8,033억원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5,468(100.0)	9(100.0)	2,555(100.0)
토지	459(8.4)	9(100.0)	542(21.2)
건물	486(8.9)	-	1,674(65.5)
기타	4,523(82.7)	-	339(13.3)

국유재산 처분
4,19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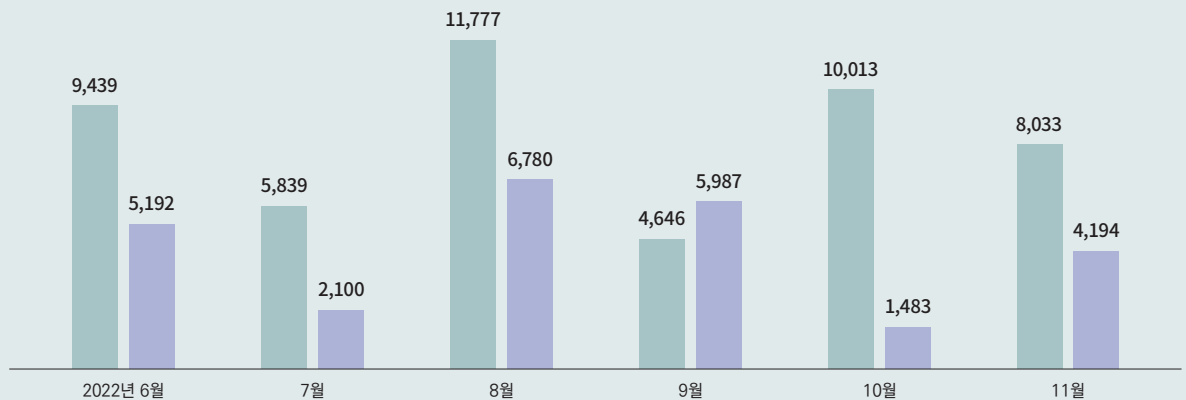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3,339(100.0)	11(100.0)	843(100.0)
토지	656(19.6)	11(100.0)	380(45.1)
건물	1(0.0)	-	343(40.7)
기타	2,682(80.3)	-	120(14.2)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취득 ■ 처분

(단위: 억원)



금리

이달의 이슈키워드



부동산 코로나19 대출 중소기업 전기차 투자
미디어 세정지원 방송 여성 학교 기업 K-게임



최근 주요국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1월 13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p 인상했다. 7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지난 한 달간 정부 여론 및 키워드 검색 시스템 내 ‘금리’ 관련 언급량이 크게 늘었다. ‘고금리’, ‘대출’ 등은 주요 연관어로 도출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금리 상황 속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의 이자지원을 통한 금융활동(이하 이차보전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김도일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doylek@kpfis.or.kr)

인플레이션 ×	대출 ×
중앙은행 ×	주택담보대출 ×
금리인상 ×	안심전환대출 ×
고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부동산 ×
최종금리 ×	미분양 ×
빅스텝 ×	다주택자 ×

주: '금리'가 포함되어 검색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행정안전부 해안시스템,
 통계청 뉴스기반통계검색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인즈 등 키워드 재구성(2023.1.13.)
 수집기간: 2022.12.9.~2023.1.13.

민간역량 활용한 재정투자,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Interest Subsidy)은 민간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정책 수혜자에게 융자하도록 하고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이에 대하여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방식을 의미한다¹. 기본적으로 민간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하기에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으며, 상황 여부가 금융기관 이윤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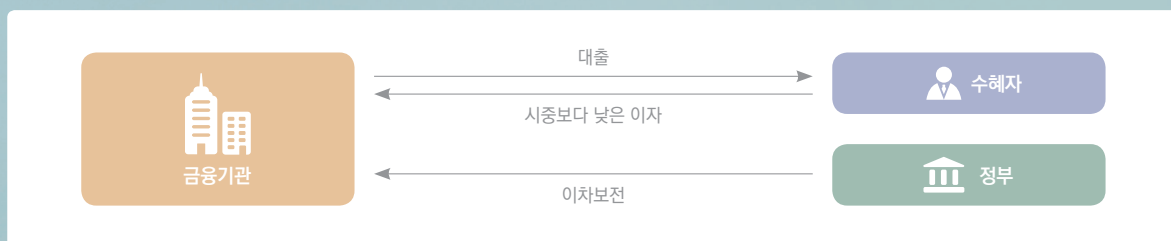
정부는 2013년 이후 재정 용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단계적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². 2022년 7월에는 새 정부의 5년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민간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를 제시했다. 정책금융 제공방식을 직접용자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우수한 고(高)신용자들에 대한 지출 규모는 줄이되 수혜 규모는 유지·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주요 이차보전 사업 소개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은 2023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차보전 규모는 2023년 본예산 기준 1조 5,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9.1% 확대된 반면 재정용자 규모는 41조 6,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축소됐다. 이차보전과 재정용자 총액 가운데 이차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전년(1.9%)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차보전사업은 주택도시기금(7,71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5,817억원), 군인복지기금(476억원) 등의 예산 규모가 크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11개 기금을 통해 15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다. 2023년 예산 중 신규 도입되거나 범위가 확대된 주요 이차보전 사업을 소개한다.

이차보전 방식



¹ 이 밖에도 정부의 금융 지원 방식으로 직접용자, 전대방식, 신용보증, 직접규제 등이 있다.

² 2012년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이차보전 및 재정융자 추이

(단위: 억원,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차보전	4,546 (1.4)	4,620 (1.4)	4,495 (1.3)	6,006 (1.7)	8,340 (2.2)	7,197 (1.6)	7,802 (1.6)	9,110 (1.9)	15,408 (3.6)
재정융자	323,913 (98.6)	319,980 (98.6)	339,009 (98.7)	347,390 (98.3)	372,706 (97.8)	446,182 (98.4)	476,709 (98.4)	466,195 (98.1)	416,640 (96.4)
계	328,460 (100.0)	324,600 (100.0)	343,504 (100.0)	353,396 (100.0)	381,046 (100.0)	453,379 (100.0)	484,511 (100.0)	475,305 (100.0)	432,048 (100.0)

주: 2015~2021년은 결산 기준, 2022, 2023년은 본예산 기준, 괄호는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 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2023년 새롭게 편성된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은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3,855백만원 전액 이차보전으로 신규 편성됐다. 최대 3%의 이차를 보전하는 동 사업은 3월 중 별도 공고를 거쳐 2023년 2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성장 지원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Net-Zero 유망기업 자금 등 신성장기반 자금의 일부가 이차보전으로 편성되었다.

친환경차 활성화 보급 지원

정부는 친환경적 자동차³의 부품을 개발, 제작, 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용자가 가능하도록 대출금리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시설 자금, M&A 자금,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 관련 예산으로 2022년, 2023년 각 24.9억원을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추천기업은 취급금융기관의 심사 이후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 2.0%p, 1.5%p로, 기업별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대출 지원

고금리 시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디딤돌대출) 및 전세대출(버팀목대출) 등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시중 대비 평균 3.5%p

³ 친환경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주택도시자금 이차보전

(단위: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11	794	901	1,372	2,178	2,615	3,565	3,850	7,656

주: 2015~2021년은 결산 기준, 2022,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농업자금 이차보전

(단위: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191	2,160	2,096	3,132	4,218	2,737	2,446	2,802	4,519

주: 2015~2021년은 결산 기준, 2022,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7,656억원으로 2022년(3,850억원) 대비 98.9% 증액 편성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자금 이차보전은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

모하고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 도입되었다. 관련 예산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2023년 4,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61.3% 증액 편성되었다.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 유통망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인한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 자금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주요국 에너지 정책방향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 발발 후 러시아 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 신규 투자, 운송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되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단계적으로 물가 상승, 생산 비용의 증가, 공급망 병목 현상을 유발해 2023년도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급, 에너지 소비 절약, 공급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각국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에너지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1. 영국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2022년 가을 보고서(Autumn Statement 2022)」를 통해 2023~2028회계연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다¹.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2023년 1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에너지 기업 수익에 대한 횡재세(에너지이익부담금)를 25%에서 35%로 인상하고, 전력공급기업을 대상으로 45%의 임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부터 보편적 지원을 줄이는 대신 취약 계층의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추가 부담금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한다. 직접 지원뿐 아니라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15% 줄이겠다는 국가적 목표도 제시했다. 다음은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가을 예산안 중 에너지 정책 관련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기업 횡재세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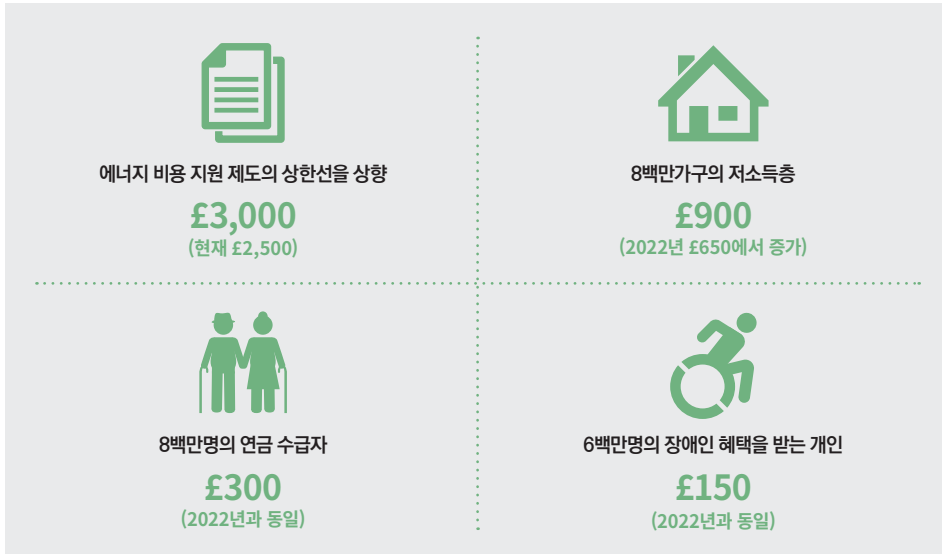
외부 요인으로부터 갑자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 일명 횡재세)를 도입한다. 최근 석유 및 가스 부문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기업에 에너지이익부담금 부과 기한을 2028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그 비율을 10%p 인상한 35%로 시행한다. 또한, 정부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 시장에서의 석유 및 가스 가격의 상승은 저렴한 저탄소 전력 비용도 상승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특별 수익에 대해 전력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윤세 45%를 부과한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에너지 요금 및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우선 정책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여 정부는 가정의 가스 및 전기료 부담 가격을 제한하는 에너지가격보장(Energy Price Guarantee, EPG) 제도를 통해 영국 전역의 가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발표된 지원책은 연평균 가계 에너지 비용을 10월부터 2년간 2,500파운드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했으나,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상한액을 3,000파운드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정부 지출은 140억파운드 규모이다. 정부는 2023년 4월 이후 고에너지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은 제한하고, 대다수의 가구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극도로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모든 에너지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의료상의 이유로 취약한 고에너지 사용자에게 부담이 더해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¹ 영국은 매년 중기재정계획과 전망을 담은 예산안을 봄(Spring Statement), 가을(Autumn Statement) 두 차례 발표한다.

〈그림 1〉 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영국 가계 에너지 지원 정책



자료: 영국 재무부(2022), 'Autumn Statemen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고품질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자국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정부는 2023년에 운송, 에너지 및 수자원에 대한 국가 정책을 최신화하고, 시스템 개혁을 통해 인프라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다. 정부는 Sizewell C(사포트해안의 사이즈웰에 있는 사이즈웰 A 및 B 원자력 발전소 사이트 근처에 위치하는 원자력 프로젝트를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와 풍력 및 태양열을 포함한 저렴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영국의 에너지 안보를 계속해서 확보할 예정이다.

기타 에너지 관련 정책

① 대체 연료 지불(Alternative Fuels Payment, AFP):

2022년 겨울부터 난방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200 파운드 수준을 보조한다. 특히 정부는 대체 연료 사용량이 많은 북아일랜드 가계에 해당 보조금을 제공한다.

② 에너지 비용 구제 계획(Energy Bill Relief Scheme, EBRs) 검토:

영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EBRs 검토는 2023년 3월 31일 이후 공공 부문을 제외한 비국내 에너지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것이다. EBRs는 에너지 위기에 피해를 입은 공공·비영리 기관·기업 부문을 대상으로 가스·전기에 대해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내년 3월 31일 이후 지원 규모는 이전보다 훨씬 줄이고 피해 정도가 큰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③ 북아일랜드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Energy Bills Support Scheme Northern Ireland, EBSS NI)
북아일랜드 가구에 2022~2023년 겨울 동안 400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요금 지원을 제공한
다. 총 3억 4,200만파운드의 보조금으로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가구에 제공된다.

④ 에너지 효율 테스크포스(Energy Efficiency Taskforce, EETF)

정부는 가계, 기업 및 공공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2021년에서
2030년까지 본 의회에서 결정된 66억파운드에 더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0억파운드
상당의 자금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EETF는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미국

2022년 3월 28일, 미 바이든 대통령은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². 더
나은 미국 사회 발전, 가정 비용 절감, 형평성 향상, 아래로부터의 경제 성장 등 바이든 대통
령이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의제 전달과 동시에 국가 장기재정전망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그중 기후 위기 극복 및 환경 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
하 DOE) 예산을 중심으로 미국의 에너지 정책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3년 에너지부 예산 개요

에너지부는 혁신적인 과학 기술 및 솔루션을 통해 기후, 에너지, 환경 및 핵 안보 문제를 해
결함으로써 국가의 번영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2023년 DOE 예산은 ① 국내 청정에너지 제
조 투자, ②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발전, ③ 기후 위기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
다. 에너지부 2023년 예산 요청은 총 482억달러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
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청정에너지 시연, 첨단 제조,
그리드 인프라 및 저소득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³의 주요 투자를 포함한다. 해당
예산은 2030년까지 경제 전반의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 50~52% 감소
시키고, 20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 개발, 시연 및 배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²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총 5.8조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10.1.~2024.9.30.) 예산안과
향후 10년간의 예산추정치를 담은 대통령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³ 美 에너지부는 주거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을 개조하여 건물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유틸리티 비용을 낮춰 공정한 방향으로 청정에너지 경제를 육성하고자 한다.



국내 청정에너지 제조 투자

정부는 국내 기후 및 청정에너지 장비 규모를 늘리는 것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보았다. 113억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혁신, 기술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미국 국내 청정에너지 제조 기반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태양광 제조 가속기를 개발하는 데 2억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10억달러의 의무투자로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 및 청정에너지 장비를 위한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국내에 글로벌 청정에너지 제조를 도입하는 것이 자국의 세계 청정기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환경 정의와 에너지 공정성 증진

이 예산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지원(historic support)을 제공한다. 먼저, 경제 영향 및 다양성 사무국(Office of Economic Impact and Diversity)이 Justice40⁴의 노력 및 형평성 실행 계획을 이행하는 데 3,400만달러, 지속적 빈곤 지역에서 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4,000만달러, 환경 정의 사명을 강화하기 위한 유산 관리 사무국에 1,300만달러를 편성했다. 또한, 새로 설립된 지역사회 프로그램 사무국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고효율 전기기기 및 시스템을 개조·보급하기 위해 1억달러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임시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사무국은 에너지 및 환경 정의 커뮤니티를 통해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탐색하고, 관련 역량을 구축하는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3,100만달러를 제공해 모두에게 평등한 청정에너지 전환 사회로 이끌 것이다.

청정에너지 혁신을 통한 기후 위기 대처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DOE의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 및 시연에 2021년 수준보다 33% 이상 증가한 92억달러를 투자한다. 이러한

투자는 청정에너지 송배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운송을 탈탄소화하고, 탄소 관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다. 산업 및 건물에서 고순도·저농축 우라늄의 가용성을 확보한다⁵. 또한 2050년까지 Net Zero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전력, 운송, 건물 및 산업 부문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립 연구소, 대학 및 기업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에너지 관련 정책

①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전국의 청정에너지 인력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1억달러를 투자한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주거용 에너지를 지원(5억 2백만달러), 가계 및 대학의 부족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1억 5천만달러), 보다 안정적인 통합 재생에너지 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망 배치 사무소 구축(9천만달러), 또한 국립연구소에서 청정에너지 배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Net-Zero Labs Initiative를 착수하기 위한 예산(5천 8백만달러)이 포함된다. 이러한 투자는 2035년까지 완전 무탄소(carbon pollution-free) 전력 및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 목표를 추진하면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② 에너지 공동체 지원:

에너지 공동체에서 경제 활성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DOE의 화석에너지 및 탄소 관리 사무소에 8억 9,300만달러를 제공한다. 최소 10개의 연방 기관에서 기관 간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석탄 및 발전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포함된다. 기관 간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에너지 전환 및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청정에너지와 기후 솔루션의 발전 도모:

에너지 고등 연구 프로젝트 기관(Advanced Research and Projects Agency-Energy, ARPA-E)에 7억달러를 배정한다. 잠재력이 높고 영향력이 큰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완화 및 탄력성과 관련된 기술적 격차를 보다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 ARPA-E에 확장된 권한을 부여한다.

4 바이든 정부는 'Justice40 Initiative'를 통해 기후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방정부 사업의 내용적 측면이나 사업의 영향 및 효과가 취약 계층에 긍정적이어야 하며, 사업의 총 효용(효과)의 40%가 취약계층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미국에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힘을 받아왔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국이 개발 중인 신형 원자로의 다수가 5~20% 사이의 고순도·저농축 우라늄(HALEU)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지난 2010년대 후반부터 HALEU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3. 호주

호주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2022-2023 예산안」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기차 도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강조했다. 앨버니지(Albanese) 새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만큼 확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 ‘Powering Australia’⁶ 슬로건을 내걸어 ① 대규모 전력망 설비 구축, ② 지역단위 전력 공급, ③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호주 정부의 「2022-2023 예산안」의 에너지 관련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wiring the Nation

현재 호주 전역에 설치된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며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력 가격을 낮추고 청정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wiring the Nation’ 프로젝트를 통해 200억의 호주 달러를 투자해 2030년까지 구식 전력 그리드(grid)⁷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태즈메이니아(Tasmania) 섬과 호주 본토를 연결하는 Marinus Link와 Battery of the Nation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확산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자국민의 노출을 줄이고, 배출 감소 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호주 지역에서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그린수소와 배터리 생산과 같은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보았다.

지역단위 전력 공급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미래 경제를 강화하고,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하며, 20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게 하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돕기 위해 19억달러 규모의 ‘Powering the Regions Fund’를 설립했다. 이는 지역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이 탈탄소화의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⁸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호주의 변모를 지원할 전망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Driving the Nation Fund는 5억달러 규모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117개 고속도로 부지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및 수소 고속도로 설치로 운송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구매 및 임대가 전체의 75%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억 4,500만달러 규모로 부가혜택세(FBT) 및 5% 수입차 관세를 철폐한다. 약 5만달러 상당

의 전기 자동차의 경우 사업자는 연간 최대 9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급여희생약정(salary sacrifice arrangement)을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 연간 최대 4,7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전 자동차에 수입 관세가 부과되었던 경우, 구매자는 최대 2,500달러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기타 에너지 관련 정책

① 신에너지 인력 양성:

신에너지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증가하는 기술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견습생들은 최대 1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태양광 설비, 관리,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그린수소 생산 등이다.

② 공유 배터리와 태양광 은행:

가정용 태양광 프로그램을 위해 2억 2,430만달러 규모가 지원된다. 공유 배터리 프로그램은 최대 10만가구에 400개의 공유 배터리를 제공하여 가장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잉여 태양열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력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최대 2만 5천가구가 저렴한 태양열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용 태양열 은행 프로그램에 1억 220만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2022-2023 호주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 호주 재무부(2022), 「Budget 2022-2023 Overview」, pp.28-29

- 6 세계 최대 철광석·석탄 생산국인 호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국가다. 새 정부는 'Powering Australia'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력 요금을 절감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7 에너지 산업에서의 그리드는 발전소부터 송배전 과정을 거쳐 전력이 공급되는 체계인 전력망을 의미한다.
- 8 배출 감축분이 타 영역의 배출 증가로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10만톤 이상 배출 사업장의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박하영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사원(hazero@kpfis.or.kr)

한국재정정보원은 2019년도에 정부보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dBrain⁺ 보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2021년도에는 장기보관금* 관리를 위해 보관금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나라재정>은 보관금 관리체계를 중점으로 정부보관금 중 장기보관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장기보관금: 국민에게 환급 또는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부처의 보관금 관리 계좌에 장기간 예치 중인 보관금

1. 정부보관금이란?

정부보관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 및 사유금을 말하며, 공탁금, 보증금, 압류 및 압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이 있다. 2021회계연도 정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보관금 규모는 13조 7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원)은 2019년도 기획재정부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 T/F(이하 보관금 관리협의체)'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보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dBrain⁺ 보관금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보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관금관리 시스템은 보관금관리를 위한 '표준 분류 유형'을 도입하고 중앙관서 단위의 실적 마감을 수행하여 정부보관금의 정확한 유형별 현황과 실적 집계가 용이해졌다.

보관금관리 시스템 구축은 정부보관금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이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후에도 재정원은 보관금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정부보관금 관리를 지원했다.

2. 장기보관금이란?

장기보관금이란 국민에게 환급 또는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부처의 보관금 관리 계좌에 장기간 예치 중인 보관금을 말한다. 정부보관금법 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따르면,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정원은 2019년 보관금관리 시스템의 구축 이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추가 과제로 장기보관금 관리에 대한 보관금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했다.

3. 장기보관금 관리 강화

재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에 장기간 보관 중인 장기보관금 감소를 위해 부처 담당자가 dBrain+ 보관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장기보관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부처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장기보관금 현황 파악과 환급 및 국고귀속 업무처리를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원은 부처별 담당자에게 장기보관금에 대한 작업절차 및 이용 매뉴얼 등을 안내함으로써 장기보관금에 대한 적기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보관금 전체 내역 조회화면에서 '장기보관금'만 대상으로 별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조회 시점으로부터 수납 일자가 10년 이상 경과한 보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40

3) dBrain⁺ 매뉴얼 작성 및 업무 가이드

장기보관금 처리 관련 보관금관리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작성했고, 13개 부처에 dBrain⁺ 안내문을 발송하여 장기보관금 처리를 지원했다. 매뉴얼은 dBrain⁺ 재정포털 > 알림소통마당 > 정보공유방 > 업무매뉴얼 게시판에서 [매뉴얼] 수입관리_10년 이상 장기보관금 업무처리 매뉴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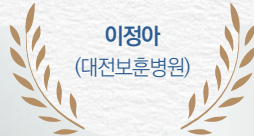
4. 맺음말

재정원은 정부보관금 '표준 분류 유형을 도입'하고, 정부보관금 관련 정부결산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는 등 보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및 결산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보관금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보관금 관련 보관금관리 시스템 개선을 적극 실행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의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보관금관리 시스템은 부처 담당자가 화면에서 장기보관금을 조회하거나 환급 또는 국고귀속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재정원은 앞으로도 장기보관금의 미처리 건과 신규 발생 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기능을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재정당국과 보관금 관리체계를 보완해나감으로써 국가재정이 사각지대 없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관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존엄한 생애말기 지원 사업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2022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대상



새로운 업무도 힘든데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까지?

2021년 5월 호스피스 사업실로 갑작스럽게 발령 받았다. 코디네이터로 입원형 호스피스 국고보조금을 집행해야 했다. 전임자에게 처음 들어본 ‘e나라도움’. 뭐지? 호스피스 전문기관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처리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e나라도움이란단. 국고보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절차에 맞게 잘 써야 한

다고 했다. 모르는 용어들에 덜컥 겁부터 났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은 방문을 주로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바로 물어볼 수 없어서 어떻게 업무를 해나갈지 무척 당황스럽고 난감했다.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e나라도움 고객센터

국고카드 사용은 어디서? 전자계산서 사용은 어디서? 사이트 상단에 매뉴얼을 클릭하여 내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 찬찬히 읽어보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의문이 들면 즉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초보자임을 밝히고 어려운 점에 대해 상담했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원격을 사용해 직접 해결해주셨다.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며 찬찬히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셨다. 고객센터 직원분이 글로 보는 매뉴얼이 어렵다면 동영상 매뉴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조언을 듣고 나서 보조사업자 정산관리 업무 흐름부터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 공부할 수 있었다. e나라도움이 어떤 절차로 교부, 집행, 정산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었고 다음에 해야 하는 업무도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야말로 나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e나라도움 고객센터였다.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

우리 호스피스 사업실에 신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들어왔다. 신규 직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처리 등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한 업무가 처음이라 너무 어렵다고 했다. 나는 활짝 웃으며 신규 직원에게 말했다.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 우선 동영상 매뉴얼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보며 연습해보길 추천해줬다.

2개월이 지난 후, 신규 직원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e나라도움 시스템 처리를 척척 해나가고 있다. 타 부서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이 처음이라며 호스피스는 국고보조금 처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 좀 알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1년도 되지 않은 내가 직접 타 부서에 방문하여 집행, 정산 등 e나라도움 시스템 업무처리를 도울 수 있었다.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e나라도움!”

e나라도움의 존엄한 생애말기 지원 사업

“덕분에 정말 고맙습니다”

호스피스 국고보조금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존엄한 생애말기 지원 사업에 쓰인다. 이렇게



중요한 호스피스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 연도부터 호스피스 병동 환자를 위한 임종 돌봄 키트 제작과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정서적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근조화환 지원 서비스 ‘국화꽃 향기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쉽게 국고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e나라도움 덕분에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내 꿈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업무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나의 꿈이 되어갔다.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가 내 마음 한 곳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e나라도움! 나에게 새로운 꿈과 방향성을 찾아주어서. 이제 나의 꿈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다.

글로벌 정책 인재를 키우는 원동력 **KDI 국제정책대학원**

Interview

김현욱 기획처장



국제화와 세계화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국제협력과 국가 정책 수립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리더들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1997년 설립 이래 공공행정과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많은 리더를 양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김현욱 기획처장에게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해 들었다.

글. 한울 사진. 임근재

최고의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태로 하여 1997년 12월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미래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공공리더 교육 허브’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개발 경제 및 공공 정책 분야에서 이론 지식과 실무 기술을 갖춘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지난 25년 동안 공공 정책과 공공 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자문, 국내외 기관과의 교육·연구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해온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어젠다 발굴 및 정책 제안을 통해 풍부한 지적자산을 축적해왔고, 또한 이를 최신 이론과 접목해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세계 유수 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에 견줄 수 있는 대학원으로 발전했으며, 미주권 대학 외 최초로 전 석사 과정 모두 전미행정대학원연합회(NASPAA) 인증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NASPAA는 공공학 분야를 심도 있게 가르치는 경쟁력 높은 학교에만 수여하는 국제인증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의실의 학생 중 절반가량

이 외국인이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 각기 다른 대륙에서 온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수학한 동문은 141개국 6,700여 명에 달하고 전 세계 57개국에 동문회가 구성돼 있다. 이처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폭넓은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대외 협력 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현욱 기획처장의 설명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동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140개국 국제 동문이 한국 정부·기업·개인과 협력할 수 있는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 및 정책·지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의 효율성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욱 기획처장이 속해 있는 기획처는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교직원 복리후생, 급여, 대학원 및 기숙사 시설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한국개발연구원의 타 조직과 다른 점은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기획처에서 하는 여러 업무 중 예산 확보와 집행은 대학원의 교육, 연구, 경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



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매년 이사회에 예산안을 올려 심의를 받고, 승인이 나면 국무조정실의 확인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외에 국내의 재단이나 공공기업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그리고 정부기관과 학회 등의 용역 사업을 통해 얻는 자체 수입이 있는데, 대학원 운영에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재정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2022년 예산은 209억원으로 인건비 103억원, 경상운영비 10억원, 기관 고유사업비 28억원, 일반사업비 34억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25억원, 시설비 1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일반사업비 예산은 세종 국가경영 과정, 개발정책·지식재산 과정, 포스트 코로나 교육혁신,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사업, 개발협력 실증연구 사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휴먼인프라 강화 사업, 한국발전경험 데이터베이스 사업, 세종권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 사업 등의 10개 항목으로 나뉘어 구

성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지원, 세계은행과의 공동사업,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짜여졌다.

“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부처의 발제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세종국가정책포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책 개방성 확대 및 어젠다 발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식재산, 지방자치, 통계품질, 재정, 예산, 경제동향, 공정거래, 일자리, 개발원조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 현안을 주제로 개최돼 왔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7.8%에 이를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공공기업, 공공기관 고위급 인력을 대상으로 중장기(1년) 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사회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국제 공공부문 인력을 대상으로 단기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응형 학습법,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등의 최신 학습법을 교과목에 접목해 수요자 중심의 학습력을 높이는데도 힘쓰고 있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대비 18.0% 증가한 247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시설비가 360%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기숙사 증축 사업과 국가정책 연구교육 허브 구축을 위한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 및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간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해 설립 25주년을 맞았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나온 25년과 향후 25년을 설계하기 위해 주한대사 초청 특강, 공공정책교육 학술대회, 국제동문 홈커밍행사 등의 다양한 학술행사와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했다. 김현욱 기획처장에게도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역량이 더욱 발전하고 강화돼야 합니다. 지난해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종시에 자리한 입지적 조건이 이러한 이러한 발전 방향성에 힘이 돼 주리라 기대합니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글로벌 공공리더 교육 허브’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세계적 공공정책대학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

중이다. 김현욱 기획처장은 ‘연결’을 강조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수요도 변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경영, 데이터 기반 정책 등의 데이터 관련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공부문이나 정책 분석 또는 정책 입안에서 요구되는 것도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일 테니까요.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정책 관련자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기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꽃피우는 든든한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내일을 기대한다.

“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 및
정책·지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의 효율성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

조선의 신도시 수원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새롭게 태어난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미래를 위한 환경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색동 일원을 중심으로 수원시가 그리는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도심 속 수목원 영흥숲공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을 돌아본다.

글. 송지유 사진. 조병우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지, 고색동 일원

수원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고색동, 평동 일원(탑동, 호매실동 일부)가 선정된 것이 변곡점이 되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을 구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약 9km² 면적에, 행정타운·공동주택·상업지구·산업단지 등이 모여 있는 수인분당선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지역이 해당된다. 2023년도에는 설계를 위한 국비 12억원이 포함된 예산 2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6년도까지 최대 400억의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성과의 지속 및 확산 등을 고려하여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춰 계획연도는 2030년까지다.

‘그린 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

수원시는 ‘그린 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를 사업비전으로 분야별 전략사업을 세웠다. 먼저 ‘플러스 에너지 행정타운’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이다. 권선구 행정타운 일대 공공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을 활용한 발전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일대의 상가·업무빌딩, 공동·단독주택에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과 미니태양광,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색동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고색동 일대 국공유지와 미조성 공원부지 등

에 도심 속 ‘탄소중립가든과 탄소상쇄숲’을 조성한다. 더불어 태양광 전기가 충전기 설치 등으로 ‘그린수소 중심의 탄소중립 모빌리티’를 실현할 계획이다. 쿨루프(시원한 건물 지붕), 쿨페이브먼트(시원한 통학로), 스마트 정류장, 아파트 방음벽 벽면 녹화 등을 통한 ‘도심 온도 낮추기, 기후쉼터 마련’ 사업도 진행한다.

‘스마트한 폐기물 관리와 레인시티 수원’을 만들 계획도 세웠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폐플라스틱의 사전 분리율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 및 빗물을 활용한 물 순환 프로그램으로 자원순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사회 전환 프로그램’을 활용, 탄소관리 모바일 앱을 통한 시민의 참여로 가구당 20%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업의 기술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26년 고색동에서는 그린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라이프’가 일상이 된다.

수목원 품은 도심 속 탄소상쇄숲 ‘영홍숲공원’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영홍숲공원을 찾았다. 미조성 공원부지에 도심 속 ‘탄소상쇄숲’을 조성한 대표적 사업이다. 영홍숲공원은 1969년도에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지만 재정적 문제로 50여 년간 조성되지 못했다. 국내 최초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수원시와 (주)천년수원의 추진으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영홍숲공원은 수원시 최초로 수목원을 품은 공원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목원(14만 6천m²) 포함 축구장 70개 넓이(50만 1천 937m²) 규모로 조성되었다. 현재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산책로 등을 임



시 개방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 2단계 공사 완료 후 수목원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중앙의 수목원을 빙 둘러 가는 숲길로 공원 산책을 시작해 본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해 숲 놀이터, 파고라 쉼터 등 곳곳에 조성된 시설들이 눈길을 끈다. 영흥숲공원은 산지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살려 조성된 만큼 야트막한 산길에 깊은 숲처럼 우거져 있다. 정상 바로 아래에는 탁 트인 전망이 한눈

에 들어오는 전망대가 있다. 파고라와 원목 테이블, 의자는 전망 좋은 루프탑 카페가 부럽지 않다. 뒤로 한껏 젖혀진 원목 의자에 앉으니 파란 하늘이 오롯이 눈에 담기며, 무념무상 하늘명에 잠시나마 빠져들게 된다. 숲 테라피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언덕길을 내려가니 수목원이다. 뽕뽕 얼어붙은 연못과 기울어진 듯 독특한 디자인의 유리온실 등 수목원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수목원은 <전시정원>, <수집정원>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전시정원은 블루밍가든, 암석원, 정조효원, 휴계정원으로, 수집정원은 무궁화원, 비비추원, 수국원 등 1천여 종의 나무·꽃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도심 속 녹색 쉼터가 되어줄 영흥숲공원에 하루빨리 봄빛이 활짝 피어나길 그려본다.



Tip

영흥숲공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0-1

화성행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 031-241-270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사적 제478호)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조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현릉원으로 옮기면서 수원 화성을 조성했고, 1789년에 팔달산 동쪽 기슭에 화성행궁도 건립했다. 정조가 현릉원을 참배할 때 머물던 별궁이며 관청으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훼손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 복원 사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궁의 정문인 신평루로 들어선다. 본래 '진남루'에서 정조가 '신평루'로 고쳤다. 또 하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만큼 수원을 아끼는 정조의 마음이 담겨 있다. 행궁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집사청과 군영, 왼쪽에는 서리청과 비장청 등 관청 건물들이 있다. 좌익문을 지나면 왼쪽에 의녀와 무사 조형물이 세워진 포토존이 있어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임을 알 수 있다. 화성행궁은 '이산', '왕의 남자', '구르미 그린 달빛'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이기도 하다.



중양문을 지나니 화성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이 나온다.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진찬례가 치러졌던 곳이다. 봉수당 한쪽에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하는 모습이 재현되어 그 성대함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봉수당 왼쪽의 장락당은 혜경궁의 침전으로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정조가 직접 편액을 써서 걸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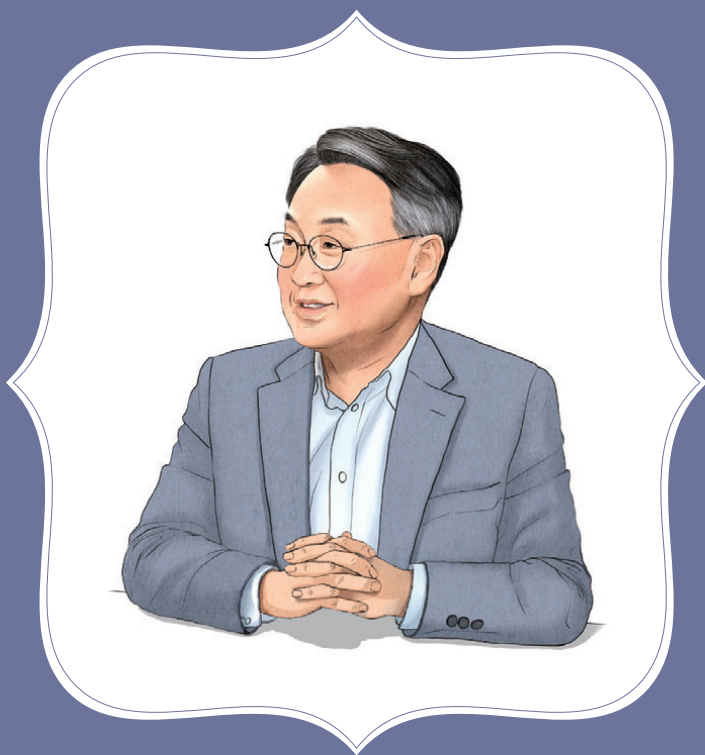
복내당이라 쓰인 작은 문을 통과하면 '대장금'에서 음식 만드는 장면을 촬영했던 부엌이 나오고, 수라간 음식들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안쪽 막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악공들이 모여서 연습하거나 악기를 손질하는 외정리소가 있다. 정조가 화성에 행차할 때 신하들을 접견하는 건물인 유여택의 한쪽에 놓인 뒤주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화성행궁 인근의 행궁동으로 향하자 '생태교통마을'임을 알리는 조형물을 만난다. 한 달 동안 자동차가 없는 마을이 되었던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 이후 지속적으로 에코 모빌리티를 지향하는 생태교통 도시 수원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기반으로 초록빛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단단하게 내딛고 있는 수원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의 그린라이프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보수 학자의 추경예산안과 2023년 경기전망 -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②

글. 장윤정 일러스트. YRi(@yri_yul)



[편집자 주]

〈나라재정〉은 2023년도 신년 기획으로 ‘한국 재정사의 현장’ 연재를 시작합니다. 경제-재정정책 현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주인공들을 만나 재정의 현재 모습을 결정지은 제도 변천과 의사결정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전합니다. 첫 손님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유일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유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1월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아쉬움이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마련인지 이후로 유 부총리는 작은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몇 가지의 기억을 이어갔다.

“성과와 아쉬움 모두로 기억되는 또 한 가지 정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였어요. ‘성과연봉제 도입’의 정책 결정과정 보다 공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 더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 각각의 경영진을 설득하는 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또 그 경영진들이 사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도 참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기관의 동의를 얻어 낸 것은, 2017년 4월에 접어들 때였어요. 이미 탄핵 국면이 한창이었던 때였죠. 뒤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던 새 정권이 들어서자 무효화되었습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기관 한 곳 한 곳의 동의를 얻느라 들었던 시간과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된 셈이니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담당 국장은 자신이 설득했던 기관들에게 이번에는 도입을 취소하라고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참 성실하고 꼼꼼한 양반이었는데,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당시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고 정기준 국장으로, 유일호 부총리 재임 기간인 2016년부터 2017년 중반 시절을 동고동락했다. 이후 2017년 9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8년 2월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언론에서는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업무에 치밀한 성격의 정 국장이 가상화폐 대책을 조율하던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 만에 세 배가 급등하던 때였다. 또 다른 언론 보도는 그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이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범정부 가상화

페 정책 등 현안이 집중되는 ‘핫이슈’ 업무에 일복이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잠자리에 든 뒤 일어나지 못했다는데 참 아깝게 간 사람이에요. 정 국장 장례식장에 가니 참 황망합니다. 부인 분에게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한들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어제의 자신과 입장이 거꾸로 바뀌더라도, 따라잡기 힘든 새로운 현상이 정책 과제로 등장하더라도 의연하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던故 정 국장의 공직자 정신에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아쉬운 점은요.” 잠시의 침묵을 깨고 유 부총리가 가라앉은 대화 분위기를 전환하 시겠다는 듯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내가 그래도 평소에 보수적인 재정운용을 주장해 온 학자 출신인데, 재임 기간 중에 추경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시경제 측면에서 필요성이 충분했지만, 이거 갖고 놀리려 드는 사람도 좀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은 흔히 정부의 지출을 연초 계획하였던 것보다 늘리는 과정에서 편성되며, 많은 경우 나랏빚을 늘리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정책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당시의 거시경제 측면이 어땠기에 그랬을까?

두 차례 중 첫 번째인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은 7월 하순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편성되었다. 2016년 하반기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우리 경제에 몰아치던 시기였다.

이렇게 경기 둔화가 체감되던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추가경정예산은 약 11조원 규모로 꾸려졌다. 그런데 재원은 모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마

런할 수 있었다. 예상 국세수입 증가분(9.8조원)과, 지난해의 세계잉여금 잔액(1.2조원)을 투입한 것이다. 이 중 세계잉여금 잔액 1.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도록 편성했다.

두 번째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정권이 교체된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명 직전인 6월 초에 유 부총리의 손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속되고 있던 고용시장 침체와 분배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추경이었다. 규모는 11.2조원, 재원은 지난해의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과 국세 예상증가분(8.8조원) 및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조달하여 국채 증가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유 부총리 재임 시의 추경예산은 이렇게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두 가지를 모두 챙겼다는 특징이 있다. 추경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추가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고, 첫 번째 추경은 국가채무를 일부 상환함으로써 채무비율을 감소시키기까지 한 것이다. 물론 조선업에서 비롯된 어려운 고용·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빅 사이클이 연이어 초과세수를 가져온 행운도 따랐다. 그러나 결코 과거의 입장에만 얽매이지 않았던 그의 유연한 선택 덕분에 적절한 재정 투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 부총리는 뒤이

어 경제의 장기 전략과 대책에 좀 더 신경 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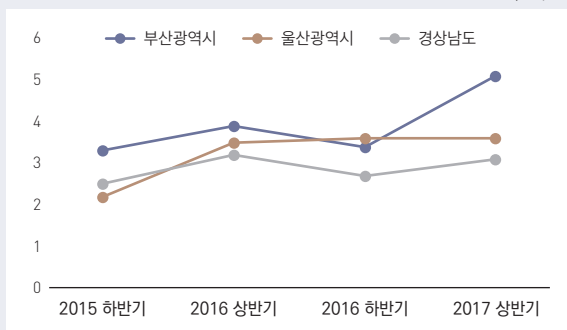
“장기 정책비전 수립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시경제 상황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니까 그거 해아리다 보면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재정안정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데 지나서 보니 그런 쪽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다른 분들도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장기전략회의가 꾸려지긴 했었어요. 최종찬 전 장관이 민간 위원장을 맡았고, 그때도 참석해서 중요한 것은 아는데 마음만큼 신경을 많이 못써서 안타깝다고 발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들한테 얘기만 하고 결국 정책개발에는 큰 공을 들이지 못했어요.”

유일호 부총리가 참여한 제3기 중장기전략회의는 2016년 11월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을 3대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2017년 3월 각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격랑 속에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그는 못내 아쉬워하는 듯 보였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하나는,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고 원체 도입되려면 제대로 되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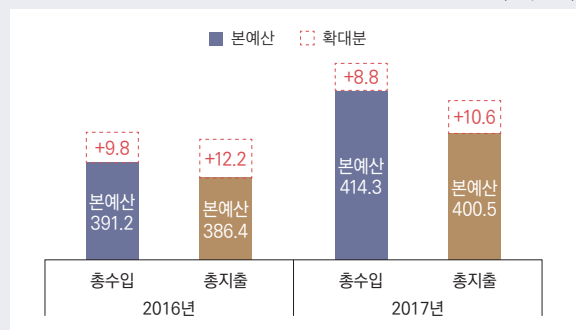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소 밀집 경남지역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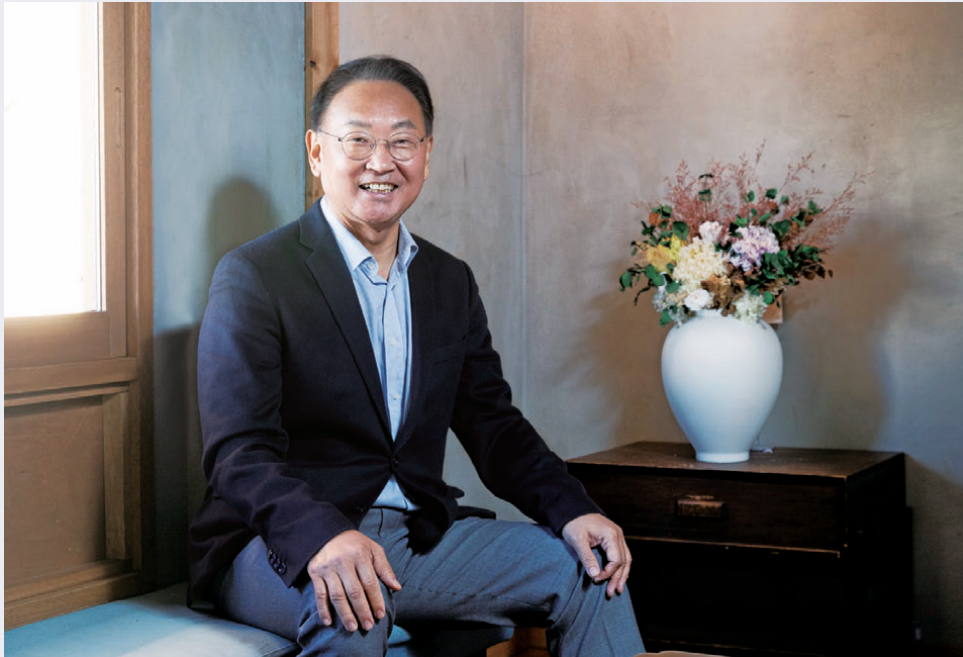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 2016년 추경 규모

(단위: 조원)





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제도설계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쉬움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준칙이라는 게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예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재정준칙이 유명무실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운용은 정책당국자가 책임감을 갖고 조심해서 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선언에 불과하더라도 뭔가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윽고 화제를 전환하여,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그에게 2023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물었다.

“어렵죠. 2023년은 불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기관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2024년에 반등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일 텐데, 희망적인 대외요인 두 가지는 미국 물가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고 하니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이제 늦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

라이나도 2023년 중에는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미·중 간의 문제는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 정도만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외 상황이 이렇게 2023년도에는 뭔가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에 선순환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24년일 테니까 2023년은 불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급등한 이자로 얹어진 지갑에 대한 압박감이 직장인 사이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2월이다. 그가 보는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진단 그리고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음 호에서 만나보자.

엄정한 회계로 무역을 장악한 개성상인 복식부기의 원리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우리는 특정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여러 회사들 가운데 어디가 더 나은지 비교한 후에야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경영자는 회사의 올해 경영 성과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떠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회사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 역시 각 경제 주체들에 세금을 부과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들도 자신이 낼 세금에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경제 주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특정 기업의 경영 활동을 파악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때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회계정보이다.

회계란 쉽게 말해 기업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지출한 생활비와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 거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이는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집안 살림이야 가족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은 주주, 경영자, 채권자, 은행, 소비자, 정부 등 여러 경제 주체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회계정보의 대부분은 재무제표에 투영된다. 재무제표란 이러한 목적을 가진 회계정보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보고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계가 회사의 경영 성과에 성적을 매기는 방법이라면, 재무제표는 회사의 성적이 표기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 내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기업 외부 관계자들도 특정 기업의 경영 성과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재무제표를 확인한다. 개성상인은 다른 상인 집단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우위에 있었다. 개성상인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술탄도전자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시장의 지배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의사결정들을 시스템화하고 표준화했기 때문이다. 개성상인은 독특하고 창의적인 조직 시스템과 운영 매뉴얼을 통해서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다. 이는 기술력이나 제품의 우월성 못지않게 경영 시스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

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우위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찍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상인이었던 개성상인들 역시 자신들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개성상인은 전국을 연결하는 송방이라는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조선 팔도의 상권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까지 장악했다.

개성상인은 상업 거래의 규모가 커지고 국내는 물론 국외로까지 유통이 확산되어 나감에 따라 상업 활동의 전 과정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조직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개성상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혼자 힘만으로 점점 방대해지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성상인들은 방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사용인 제도다. 대개 개성상인은 사용인의 신분으로 차인, 서사, 수사환, 사환을 고용해 상업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개성상인이라는 조직의 내부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는 전문인으로 활동했다.

먼저 차인에 대해 살펴보자. 개성상인 CEO들은 자신들이 방대한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분할하기 위해 바로 밑에 차인이라는 신분의 상인을 두고 자신을 돕는 일에 사용하거나 자신을 대리해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차인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전문경영인을 밑에 둔 것이다.

개성상인 밑에서 차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성상인에게 자본금이나 상품을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고 상업 거래상의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차인 스스로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지사의 의사결정을 현지의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브랜드 관리 등의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용인이 자본과 상품을 제공하고 차인이 판매한 후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경우이다. 이는 일종의 스톡옵션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여 차인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밖에 서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회계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보통 월급제로 고용되었다. 수사환은 행상 등을 관리하는 일종의 현장 관리자들로 정해진 보수 없이 영업 실적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마지막으로 사환은 말단 직원으로 상품 판매나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개성상인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들 중 일부를 차인, 서사, 수사환, 사환들에게 분배하여 수행토록 하는 조직구조를 구축하고, 자신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
 개성상인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들 중
 일부를 차인, 서사, 수사환,
 사환 등에게 분배하여
 수행토록 하는 조직구조를 구축하고,
 자신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개성상인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일본 등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경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재무제표, 즉 사개치부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개성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은 사업 품목과 사업 지역이 확대로 이어졌다. 거래 규모와 유통구조도 자연스레 커졌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장부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개성상인들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정한 회계처리 방식인 사개치부법(四介治簿法)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사개치부법은 그 뜻 그대로 자본이나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 내역을 네 가지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회계처리 방식에 따르면 모든 상품 거래와 자본의 흐름은 채권, 채무, 매입, 매각으로 구분되어 장부에 기록된다. 사개치부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는 크게 일기와 장책(帳冊) 그리고 기타 보조문서로 구성된다. 일기는 상품과 자본의 입출 내역을 육하원칙

에 따라 기록한 것이고 장책은 거래처나 손님과의 거래 내역을 적어놓은 것이다.

사개치부법을 통해 개성상인이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들은 오늘날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재무제표는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다. 먼저 대차대조표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여기에는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자신의 돈인지 남의 돈을 빌린 것인지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란 경영 활동의 여러 결과들을 기록한 것이다. 기업은 자산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용을 투여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한다.

자본변동표는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변동 내역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또한 회사가 경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했을 때 그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자본변동표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현금이란 실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및 만기 3개월 이내의 채권 등도 포함된다.

우리는 가끔 신문 지면에서 흑자도산기업이라는

표현을 목격하곤 한다. 왜 흑자를 내는 기업이 망하는 걸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거래가 대부분 외상으로 이뤄질 경우 분명 흑자 기업임에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외상 금액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원료비나 은행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현금이 부족해 이를 제품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은 항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얼마인지, 경영활동으로 전개된 현금 흐름은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현금흐름표가 필요한 이유다. 개성상인들 역시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현금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부인 사개치부법을 만들어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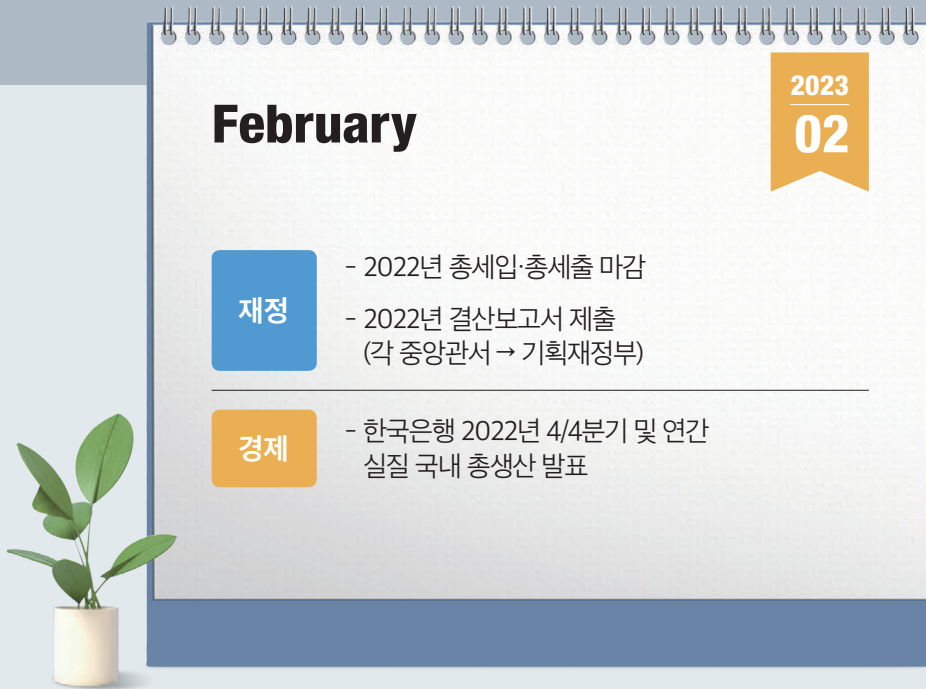
우리가 사개치부법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개치부법은 현대적 회계처리 방식인 복식부기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식부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변동 내역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부 작성법을 말한다. 단식부기와 비교해 설명하면, 단식부기는 단순히 거래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일렬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만약 매일매

일 지출한 용돈 내역을 다이어리에 기록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단식부기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용돈을 어떤 용도로 지출했는지 별도의 원칙에 의해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먼저 지출된 금액을 먼저 기록하는 장부 작성법이 단식부기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는 장부를 반으로 나누어 자금 변동의 특성에 따라 양쪽에 구분하여 기록한다. 반으로 나누어진 장부에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는데 차변에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자금의 조달 방법과 수입을 기록한다. 즉, 용돈을 어머니가 주셨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벌었는지 등의 용돈 조달 방법은 대변에 기록하고, 조달된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차변에 기록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특정 거래의 결과를 양쪽에 동시에 기입하기 때문에 기록된 차변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복식부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로 장부상의 누락이나 오류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거래를 수행하는 대기업이 장부상의 오류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성상인들은 이러한 복식부기의 간편함을 깨닫고 자신들만의 회계장부인 사개치부법에 이를 활용해왔다. 이는 복식부기의 원리를 처음 생각해낸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보다 2세기나 앞선 것이었다.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1.17.)

- 정부는 2023년 재정정책을 향후 4가지 큰 틀에서 운영하고 본격적인 국정성과 창출에 재정역량 총집중 예정
 - (건전재정기조 착근)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재정준칙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
 - (재정혁신 가속화) 예타제도 효율화·국유재산 민간 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노력 지속 등
 -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추진,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의 강도 높은 집행 관리·점검
 - (재정비전 2050 본격 추진)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 예정



2023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 1.31.)

- (세계 성장률)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와 주요국의 예상 외 건조한 소비·투자 등으로 2023년 세계 성장률은 2.9%로 2022년 10월 대비 0.2%p 상향
 - * 선진국 1.2%(+0.1%p), 신흥국 4.0%(+0.3%p), 한국 1.7%(△0.3%p)
- (세계 인플레이션) 긴축 통화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제 연료·상품가격 하락 여파로 점차 하락 예상
 - * 2023년 6.6%(+0.1%p), 2024년 4.3%(+0.2%p)
- (위험요인) 2022년 10월 전망 대비 일부 완화되었으나, 중국리스크, 인플레이션, 부채, 경제분절화 등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
- (정책권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분절화 대응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

JANUARY

01

재정

- 2024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2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 2022년 총세입 총세출 마감
- 2022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발표

MARCH

03

재정

-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APRIL

04

재정

- 2022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2022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재정

- 2024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2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2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2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통계청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3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재정

-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

경제

- 통계청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발표

AUGUST

08

재정

-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2023~2027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확정

경제

- 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재정

- 2024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OCTOBER

10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경제

- 통계청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재정

- 2024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해 주세요.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독자 QUIZ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재정집행 관리방안의 하나로 회계연도 중 상반기 경기부진에 대비해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과거 균형집행, 신속집행이라고 불린 이 제도는?

답

제도

독자편지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010-****-499



‘한국 재정사의 현장’을 통해 유일호 전 부총리의 공공부문 재정건전화 노력과 유특회계의 탄생 과정을 생생히 엿볼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기사 속 주인공처럼 지금의 우리나라

선진 재정 시스템 기반을 만드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 기간 2023. 2. 10. ~ 2023. 2. 20.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555

010-****-526

010-****-253

010-****-302

010-****-526

010-****-526

010-****-766

010-****-499

010-****-262

010-****-120



한국소아암재단

매년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모든 소아암 환아가
새 생명을 얻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배우고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투병 중인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백만 천사가 되어주세요.

고민잡아,
다 잘될 거야!
덕분에,
오늘 이식을 받아요.



(재)한국소아암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어린이 및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후원 문의 : 02-3675-1145~6

이 메 일 : soaam9191@naver.com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0401-04-025956

(재)한국소아암재단

본 광고는 한국재정정보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재)한국소아암재단 무료 광고입니다.